민주당 지지도 한나라 조사서도 앞서

민주 23%·한나라 21% … 4년만에 처음

한나라당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한나라당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나라당 쇄신특위에 따르면 지난 2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지지도의 경우 민주당 23.0%, 한나라당 21.1%, 민주노동당 6.9%, 친박연대 5.5%, 자유선진당 3% 등의 순이었다.

다른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앞선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한나라당 자체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 2005년 '4.30 재보선'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과잉수사라는 의견(39.5%)과 정치보복성 수사(37.7%)라는 의견이 비슷했고,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은 17.8%에 그쳤다.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대통령 사과 여부에 대해선 39.8%가 도의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24%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또 현 정부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3%가 부정적이었고, 31.5%만 긍정적 평가를 각각 내렸다.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과 부유층 중심 정책추진, 청와대와 정부 편파인사에 대해선 68.4%, 70.2%, 66.3%가 각각 공감했다.

당내 불화합 원인으로는 친이-친박 양 측근(49.9%), 대통령 포용성 부족(30%), 박근혜 전 대표 비협조(7.8%) 등을 꼽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도부 사퇴·조기 숄大' 정면 충돌

■한나라 워크숍

한나라당이 4일 과천 공무원교육센터에서 의원연찬회를 열고 당정청 쇄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나 계파 간 이견으로 정면 충돌했다.

당 쇄신특위와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이 정국수습 차원에서 제시한 당 지도부퇴진 요구에 대해 지도부 및 친박(친박근혜)계가 강력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청와대 측도 쇄신특위의 안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 전체가 내분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도부 용퇴 및 조기전대 격돌 =남경필 의원을 시작으로 임해규·권택기·김성태·김용태·정옥임·정태근·조문환 의원 등의 지도부 퇴진 요구가 잇따랐다.

남경필 의원은 "재보선 패배의 책임이 당 지도부에 있기 때문에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라 당의 쇄신과 화합을 위해 용퇴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물꼬를 터주는 게 당과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박희태 대표는 태평성대 때의 대표이지 지금은 안된다"고 가세했으며 정태근 의원은 "박대표 사퇴는 국민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라고 강조했다.

권택기 의원은 "당 통합을 위한 전대로 나아가야 하며, 전대는 당과 국민 통합을 묶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친박계의 이성헌 의원은 "재보선 패배는 현 지도부의 잘못이 아닌 공천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2사무부총장인 나도 후보 얼굴을 제대로 못보고 공천이 이뤄졌다"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지도부를 바꿔도 소용없다"고 지도부 교체론에 정면 반발했다.

이정현 의원은 "조기 전대는 국민 관심사가 아니며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이며 대통령의 정책기조"라며 "불통, 배제, 독주가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비주류와 야당에 대한 배제를 깨고 정책 및 인사에 있어서의 탕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쇄신 주장 의원들은 또 조기 전대 개최 요구에 덧붙여진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복귀를 위한 것 아니냐'는 정치적 의구심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친이재오계인 임해규 의원은 "쇄신과 7명이 이 전 최고위원을 내세우려 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난 총선 때 국민의 심판을 받은 분이 어떻게 당 대표를 하겠느냐"며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남경필 의원은 "쇄신의 목소리가 이 전 최고위원을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이전 최고위원을 위해 쇄신을 요구하는 마음이 없다"고 못박았다.

◇당화합 및 당청소통 요구 잇따라 =권영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전 대표와 공동정권을 이뤄야 하며, 이를 통해 당과 청와대의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 화합을 요구했다.

임해규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두 지도자가 마음을 못 열면 우리라도 풀어야 한다"며 화합을 거듭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박희태 대표를 거론하며 "청와대의 일방통행에 대해 한번이라도 브레이크를 건적이 있느냐"며 당청 관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일 오전 과천 공무원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박희태(맨 오른쪽) 대표가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친이-친박 '쇄신안' 놓고 이견

'당 화합-당·청 소통' 잇단 요구

서거 정국 親盧그룹 '자중 모드'

안희정 최고 검찰 비난 자제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의 입이 무거워졌다.

안 최고위원은 4일 대전 풀뿌리시민센터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대전시민추모위원회 대표자 연석회의'에 앞서 기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받았다.

최근 민주당 안에서 친노(親盧) 인사들의 민주당 복당설이나 신당 창당설이 거론되는 와중인 만큼 대표적인 당내 친노 인사이자 지도급 인사인 안 최고위원에게 관련 질문이 쏟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밖에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안 최고위원이 대전지검에서 내사를 받은 적이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안 최고위원은 말을 아꼈다. 친노 그룹의 움직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500만 이상의 추모 인파로 대변되는 국민의 엄중한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때"라고 답변했다. 최고위원이라는 위치를 고려해 말을 아낀 것으로 풀이됐다.

검찰 수사에 불만이 없느냐는 말에도 "전국에 소나기가 내렸는데 참여정부 측근들에게만 번개 떨어지고 비가 내린다. 이런 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예상된(?) 답변을 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활동을 부정해선 안 된다. 수사는 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

민감한 질문을 피해가는 대신 자신은 '유족'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아직 사십구재(四十九齋)를 마치지 않은 유족으로, 죄인이 된 자세로 마지막 의무와 도리를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北 핵포기땐 획기적 지원"

李대통령, 美 국무부 부장관 접견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문제 등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획기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고 밝히며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도 협력해 한 목소리로 설득해야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이 대통령은 "버락 오마바 대통령 취임 이래 한·미 정상 간에 긴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 왔다"며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를 포함한 양국 관심사에 관해 오바마 대통령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이 과거와 같이 도발을 하고 나서 다시 협상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할수록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를 위해 여러 가지 일정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다"며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진 뒤 오찬을 할 예정인데 이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 국가 정상들과는 처음 갖는 행사"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쇄신론' 불편했나?

박근혜 전 대표 의원 연찬회 불참

한나라당의 쇄신과 화합 방안을 토론한 4일 의원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표가 불참했다.

측근들은 박 전 대표가 연찬회에 갈지, 안갈지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당내에서는 쇄신안의 하나로 조기전당대회 개최가 거론되고 있고, 친이(친 이명박)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가 국정에 협조하는 자세로 조기전대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물론 친박계는 여건이 성숙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박 전 대표를 조기에 정치의 전면으로 이끌어내려는 '계산'이라는 의심을 깔고 조기 전대론에 반대하고 있다.

또다른 친박 의원은 "(박 전 대표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쇄신안을 집중 논의하는 연찬회에 박 전 대표가 간다면 '듣는' 박 전 대표나, '토론하는' 의원들 모두가 불편해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과거 한나라당 쇄신을 이끈 경력을 갖고 있다. 지난 2005년 11월 야당인 한나라당 당대표로서 '9인 최고위원회의를 통한 집단 지도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목장용지 급매
◦위 치 :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목장용지 : 6,390㎡(1,933평)
◦임 야 : 4,955㎡(1,499평)
◦대 지 : 476㎡(144평)
◦도 로 : 522㎡(158평)
◦총 계 : 3,734평
◦건 평 : 2,350㎡(약700평)견사, 돈사, 주택(104㎡) 버섯재배사등
관리지역으로 필지는 여러 필지이나 한곳에 붙어있음
◦매 도 가 : 1억7천만원 (은행대출 1억 포함)
연 락 처 ☎010-3617-8810

= 합격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학원! , 無等과 만나세요!! =
7·9級 공무원 全직렬
30 40 불꽃이 주부반모집 살림경험 행교세관감법검마철교보보간복소기 정행무재사원찰악공정호건호지방술
합격 후 5년간 소방인력 8395명을 충원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 시험일 : 국)9급, 매년 4월 / 7급,7월 시행
지)9급, 매년 5월 / 7급,9월 시행
※서울 7,9급 행정직 매년 7월 시행
• 채용인원 : 7,9급국가직3- 4천명, 지방직4- 5천명
= 대한민국 공시합격의 선구자 無等!! =
개강 6월 1일 (주·야 통합반 모집) (현재상담접수중)
본 학원 강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세법, 회계학, 형사법, 민사법, 헌법, 경제학
교정학, 복지학, 소방학·법, 공정보건학, 상식, 기타
= 주간반 2개월, 야간반 3개월 완성 =
=최선을 다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
◦부대시설◦
• 경락실300여석! • 구내식당
• 인터넷경보실! • 지하주차장!
• 달콤식 학원풍 최신시설!
• 매월말 모모의 정책 모의고사 실시!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SINCE 1965 학원설립인가
44년 전통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제20회시험 10월 25일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배출 【 광주지역 3,200여명 1회~19회까지 】
여성 최고의 전문직 아파트관리소장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大개강 6월 1일 (첫전도 시작반)
국비지원 선착순
직장인을 위한 수강료 환급과정
광주고시학원
본 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첨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

전의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 순경 공채
개강 매월 초(합격시스템)
경 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6개월과정 광주지역 서제형, 오경수 합격
6개월과정
•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25(%)D/C 교재15(%)D/C
1년과정
• 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
•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50(%) D/C 교재 15(%) D/C
주저하지말고 1년 수강료 96만 도전하면 합격의 지름길!
합격배출 1위 교수진
경찰학 오 탄 • 신 경항 경찰학 개론 직강 • 남부 경찰학원 전임 • 광주 메가 경찰 학원 전임
수사 차주윤 • 강의경력 22년 • 광주 순천 메인 전임 • 광주 메가 경찰 학원 전임
영어 이방희 • 경찰 영어 70% 합격좌우 • 꼭꼭 찍어 쉽게 강의 • 강의경력 15년
형법 허문표 • FIRST최강 형법 직강 • 노량진 한국경찰 전임 • 광주 메가 학원 전임
형소법 김환중 • 사시 1차 3회 합격 • 4천등 법원 경찰수강대상 10년 강의 • 형소법출제경향이 확 바뀌고있다.
경 찰 전 문 메가경찰학원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www.gmega.co.kr ☎ 226-5050